

 금융위원회	보 도 반 박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11.8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담 당 자	김 경 문 사무관 (02-2100-2824) 김 나 혜 사무관 (02-2100-2836)	

제 목 :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습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조선일보는 11.8일자 “대출 원금도 갚아나가라니...빚에 깔리는 세입자들” 제하의 기사에서
- “금융권은 사실상 분할상환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”,
 - “전세대출에 원리금 분할상환을 ‘강제’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이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금융당국은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(10.26일)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‘인센티브’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(10.26일)」 내용 >

②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('22.1월~)

-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

- 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는 만큼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